

개성공단과 한국의 지식인: 권력과 강대국이 아닌, 국민을 위해 복무하라^{*}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Korean Intellectuals:
Not for Political Flattery or Toadyism but for the People

염규현 _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Yeom, Gyu Hyun _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촛불혁명으로 물러난 박근혜 정권이 야기한 폐해는 여전히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어느 학자는 ‘박근혜 시대’ 이후 새 정부가 극복해야 할 문제를 ‘민주주의의 훼손, 불평등의 헬조선을 만든 천박한 자본주의, 기득권 안보장사꾼들이 만든 분단체제의 종북프레임’ 등 세 가지로 정리하기도 하였다.¹⁾ 물론 이것들이 온전히 박근혜 정권 내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할 순 없다. 말 그대로 오랫동안 썩어온 우리 사회의 적폐라 할 것이다. 하지만 유독 박근혜 정권 시기에 그 폐해가 심각했다는 것 역시 부정하기 힘들다. ‘비정상적 정상화’를 내건 박 대통령이었지만, 실상은 그 반대의 현상이 우리 사회 전체를 무기력과 절망감으로 무너지게 만들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헌정 역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인해 물러난 대통령이란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역사와 민의의 심판이었다.

앞서의 세 가지 중 ‘기득권 안보장사꾼들이 만든 분단체제의 종북프레임’이 가장 가슴 아픈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단 70여 년의 시간을 무력하게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남북관계의 평화적 유지와 궁극적인 통일의 달성은 그 어느 것보다 절실한 과제이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취임식에서 ‘조국의 평화

^{*} 이 글은 필자의 사견을 정리한 것이며, 민화협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1) 김준형,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외교,” 『경향신문』, 2017.6.2.

적 통일'을 엄숙히 선서하고, 하다못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조차 비록 정치적 수사라 할지라도 '통일'을 말하고 '평화'를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그리고 병들게 만든 모든 적폐가 기실 분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점 역시 부정하기 힘들다. 모든 부조리와 불의, 비상식은 분단을 이유로 합리화되고, 묵인되어왔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70여 년을 넘기면서, 이제 그 비정상이 정상, 일상이 되어버리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노력들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취급받는,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미 오래되었다.

때문이다. 기형적인 분단체제의 중복프레임을 깨지 않는 이상, 남북은 커녕 우리 남한 자체의 생존과 발전마저도 심각한 불안정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의 무능과 오만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이 큰 과오를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기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큰 과오가 있다. 바로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인 남북이 풀어가야 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여지도록 방치하고, 나아가 공조한 점이다. 현재 사드 배치를 둘러싼 마-중의 충돌은 지난 정부들의 무능과 오만의 결과이다. 우리는 사드를 그대로 배치할 수도, 그렇다고 철수시킬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의 영토 안에서 진행되는 군사적 조치를 우리의 국익이 아닌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오직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수치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젠 이러한 행태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인식마저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전임 정권 시기를 거쳐 국민들의 인식을 지배하게 된 무력감과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을 때, 그리고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소위 지식인들이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보여준 행태는 한심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다. 물론 모든 지식인들은 아니었지만, 적지 않은 이들에게서 '어용' '부역'의 혐의를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전까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역할, 중요성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던 이들이,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었던 급작스런 공단 폐쇄 이후에는 마치 정부의 결정이 고뇌에 찬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온갖 말도 되지 않는 이유와 변명을 늘어 놓으며 합리화하기에 바빴다. 그들은 지식인이란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에 면죄부를 하사하기 바빴다. 아니, 어느 새 공단 폐쇄는 진작 했어야 할 조치로서, 박근혜 정권의 업적으로 둔갑되기도 하였다.

보통 모든 정책 결정은 그 결정으로 인해 야기될 다양한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까지 일정 부분 마련한 뒤 이뤄지는 것이 상식적이다. 하물며 개성공단 폐쇄처럼 남북 모두에게 적잖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남북관계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라면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짐작할 수 있듯, 공단의 폐쇄 결정은 그야말로 마땅한 출구전략 하나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조차 폐쇄 결정을 뒤늦게 알았고, 이후 궁색한 변명으로 공단 폐쇄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려 노력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 전혀 알 수 없고, 오히려 우리 기업인,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게 된 ‘자해적 행위’였다. 그 후과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는 장면들이 있다. 먼저 통일부장관의 변명이다. 장관은 북측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나름 수치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국회 답변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통일부는 소책자까지 만들어 개성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려 노력했다. ‘통일부’란 이름을 가진 부처가 하기엔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었지만,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장면은 공단 폐쇄로 인해 남한이 입을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어느 학자가 한 발언이었다. 그 발언은 이후 정부나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반복되기도 했다. 바로 ‘개성공단은 한국 경제에 있어 극히 미미한 부분이기엔 별 문제 아니다.’라는 발언이었다. 당시 필자가 받은 충격은 대단했다.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 간 발생할 수 있는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소통과 만남의

장을 통해 이질성을 확인하고 동질성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었던, 말 그대로 통일의 예비 연습 공간이나 다름없었던 개성공단을 단순히 경제규모만으로 판단하고, 폐쇄가 ‘별 문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저 대담한 무지와 몰지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고, 또한 무참했다. 그야말로 천박한 자본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식인이었다. 어느 작가는 “무지한 이들은 거리낌 없이 용감하고, 그 만용에 기대어 세계의 전진을 방해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마지막 장면이다. 바로 개성공단 폐쇄 이후 리얼미터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였다. 개성공단 폐쇄가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47.5%였고,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44.3%였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8.2%였다.²⁾ 당시 필자가 이런 결과를 보며 느꼈던 첫 의문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개성공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였고, 곧 이어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른 바 전문가, 학자, 언론을 통해 개성공단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다. 애초 별 관심조차 없었고, 또한 주변에서 모두 폐쇄가 옳은 결정이라고 떠들어댔으니 말이다. 반면 북한은 최근까지 관영매체나 선전매체 등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북남교류협력의 마지막 명줄이었던 개성공업지구마저 끊어버림으로써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단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일 년 전 남북관계를 완전하게 ‘결단낸’ 것이다. 거기에 지식인들의 역할 역시 적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개성공단의 재개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의 우선순위에도 빠질 수 없다.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과 폐쇄를 위해 진행된 공권력 행사가 적법한 절차와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의 비정상적인 공단 폐쇄에 따라 북한에 의해 기존 남북 간 합이들이 모두 무효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의 폐쇄를 결정했던 2016년 2월과 현재 2017년 6월의 상황은 판이하다. ‘자승자박’이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과정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2) “루비콘강 건너 대북 문제, 총선 관통할까,” 『시사위크』, 2016.2.12.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의 여지가 급격히 축소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패배주의와 사대주의에 다르지 않은 지식인들의 비관적 전망 역시 국민 정서가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흐르는 데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끄럽게도 우리 정부의 지대한 역할을 통해 이뤄진 국제사회의 촘촘한 대북 제재로 인해 개성공단 재개가 우리의 의지대로만 이뤄질 수 없다고 말한다. 마치 한국의 지식인이 아닌 제3자의 입장처럼 보일 정도이다. 연이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옵션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박근혜 정부와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2016.11.30.)로 개성공단 안에 국내 은행의 지점을 둘 수 없고, 대북교역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로 인해 공단 진출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단 시작과 가동 시기에도 국제 제재는 있었고, 우리 정부 역시 폐쇄를 결정하기 바로 전까지 개성공단이 유엔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공단 폐쇄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2016.3.2.)와 2321호에도 개성공단 폐쇄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³⁾ 다만 안보리 결의 2321호 제31조와 제32조로 핵미사일 활동 관련과 상관 없이 북한지역 은행지점 폐쇄와 대북교역에 대한 금융지원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이 결의는 건별로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어 개성공단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우리의 설명에 따라 건별로 승인을 받아 우리 은행지점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보험 가입 금지 등으로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나 진출이 여전히 막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역시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결의 2321호 제48조는 제재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상황의 평화적 해결과 긴장완화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재개가 바로 이러한 노력이 아니고 무엇인가.

쉽진 않지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성공단의 재개 역시 아주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뀐 지금에도 당장 개성공단의 재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이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군 통수권자에게

3) 김광길, “개성공단 중단 1년, 어떻게 풀어야 하나? - 국민합의로 재개 결정해야,” 『민족화해』, 85호, 2017.3~4월호.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보고를 누락해버린 국방부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우리의 문제를 유엔 안보리 결의 해석문제로 돌리고, 결국 우리 문제를 유엔에 맡기는 셈이다. 유엔이 남북한을 어여뻐 여기서 제재를 풀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과연 주권국가인가 하는 점과, 이 땅의 지식인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무엇보다 북핵 문제가 일정 부분 진전되어야 함은 물론일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핵 동결이나 폐기보다는 먼저 최소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 두 정권을 거치며, 그리고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등으로 악화된 국민의 대북정서를 감안하여,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한반도 안정에 대한 설득을 꾸준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강대국 사이에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라도 공단은 우리의 힘으로 조속히 재개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 이전 3차례의 핵실험이 진행되었을 시기에도 중단되지 않았다. 국제사회 역시 개성공단을 핵문제와 연결하여 제재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개성공단은 폐쇄되기 전까지 5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에 도움을 주고, 생존권 차원의 인권개선에 기여했다. 또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기여했고, 북한에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미하나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데에는 남한과의 경제협력 경험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기에 가능했다. 우리를 통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6월 말 예정되어 있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의 재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핵 문제 해결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주도적 역

할을 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땅의 지식인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스스로 고민해 봤으면 한다.

통일운동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활동가나,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는 학자, 또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중요한 국가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모두 결국은 생활인이다. 쉽게 말해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할 순간이 온다. 빈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겪게 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속이는 것에서 나아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들과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먹고사니즘’으로 합리화될 수 없다. 더구나 사회적인 존경과 명예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는 지식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개성공단의 폐쇄와 이제 재개를 이야기해야 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필자가 이 땅의 지식인들에게 느낀 것은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는 것과 지긋지긋한 사대주의에 갇혀 있는 무력함이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렇다는 것은 분명 아니다. 끝까지 신념을 지켜내는 이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런 이들의 목소리는 항상 작다는 점이다. 또한 앞서 ‘먹고사니즘’ 등을 이유로 ‘부역’에 나섰던 이들이 결코 ‘먹고사니즘’을 떠들 만큼 넉넉지 못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 아울러 상황이 바뀌어도 사과다운 사과 한 번 없었다는 점이다.

이제 다시 어떠한 변수로 인해 개성공단 재개가 조기에 이뤄진다면, 이들은 또 무엇이래 변명할 것인가. 또 어떤 구구절절한 이유를 들이대며, 분석하고 평가할 것인가. 벌써부터 그 민망한 모습을 상상하니 두려워진다. 『폭정』의 저자 티머시 스나이더는 20세기에 민주주의가 파시즘과 나치즘, 공산주의에 굴복한 경험을 통해 스무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중 첫 번째가 “미리 복종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의 개인들은, 억압적인 정부가 무엇을 원할지 미리 생각한 다음, 요구가 없어도 자신을 내어준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순응하는 시민은 권력자에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라 지적한다.⁴⁾ 이 땅의 지식인들은 이제 그 무슨

4) 티머시 스나이더, 『폭정-20세기의 스무 가지 교훈』 (열린책들, 2017), 22.

선민의식 따위는 버리고, 주체적인 입장과 관점에서 민족문제, 분단극복 문제를 바라봤으면 한다. 권위적인 정부는 사라졌다. 물론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하지만 더 이상 주변 핑계를 대며, 우리 문제를 외면하는 부끄러운 처사는 멈추자. 북한이 대남 전술적 차원으로 한 다음의 말은, 비록 그 의도는 의심스럽지만 내용 자체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개성공단의 재개를 넘어 남북관계가 온전히 정상적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이 땅의 지식인들이 온전한 지식인의 모습으로 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본다. 그것이 모두를 위해 참으로 행복한 길일 것이다. 부디 권력과 대국이 아닌 이 땅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복무하시길 바란다.

“송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고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통일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